

# 대전참여여성시민연대 보도자료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70번길 22-1 1층, TEL.042-331-0092, FAX.042-252-6976 www.cham.or.kr

수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짜 / 2025년 12월 2일(화)

발신 / 대전참여여성시민연대(김재섭 사무처장 042-331-0092/010-9355-3697)


제목 / **2026 대전광역시 당초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표**

---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참여여성시민연대는 1995년도에 출범하여 대전 시민과 함께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3. 2026년 대전광역시 본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침체 속에서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긴축 재정'을 표방하면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환경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실제로는 지방채 발행을 60% 가까이 폭증시켜 대규모 토건 사업과 축제 예산 규모를 키우는 위험한 '선택적 확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 증감의 극심한 불균형, '과학수도'와 '탄소중립'이라는 도시 정체성의 실종, 그리고 시민 삶을 지탱하는 복지·안전망 예산의 삭감은 예산안의 방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4. 대전참여여성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가 정보공개한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5. 이에 대전참여여성시민연대의 2026년도 당초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26년 대전광역시 당초예산(안) 분석 보고서

<b>I. 서론: 2026년 재정 여건과 분석 방향</b>	<b>1</b>
1. 2026년 정부 예산 운용 기조 및 대전시 재정 여건	1
2. 대전광역시 재정 건전성 현황: 빚내서 유지하는 확장 재정의 위험성	2
3. 분석의 관점: '민선 8기 공약사업의 명암과 시민 삶의 질'	2
<b>II. 2026년 예산안 총괄 분석</b>	<b>3</b>
1. 예산 총계 및 전년 대비 증감 추이: 빚으로 쌓아 올린 7조 원 시대의 그늘	3
2. 세입 구조 분석: 자주재원 정체와 지방채 폭주의 위험한 동거	3
3. 세출 구조 분석: 미래와 복지를 팔아 토건을 매입하다	4
<b>III. [핵심 분석 1] 지속되는 불균형: 축제·토건 vs 민생·참여</b>	<b>5</b>
1. 축제 및 홍보 예산의 고착화: '긴축'의 무풍지대	5
2. 시민 참여 예산의 행방: 선택적 지원	5
3. 대규모 SOC 사업	6
<b>IV. [핵심 분석 2] 미래 경쟁력의 위기: 과학과 기후</b>	<b>7</b>
1. '과학도시' 정체성의 실종: R&D 예산의 구조적 후퇴	7
2.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행사만 남은 '그린워싱' 예산	7
3. 환경 예산 구조: 녹색 도시의 빛바랜 청사진	8
<b>V. 분야별 세부 분석: 숫자의 착시를 걷어낸 민생의 민낯</b>	<b>9</b>
1. 사회복지: 의무 지출만 남고 '대전형 복지'는 실종	9
2. 교통 및 물류: 혁신 없는 '밀 빠진 독'에 재정 붓기	9
3. 청년 및 일자리: '지속가능성' 없는 단기 처방의 반복	10
4. 보건·식품안전: 시민의 '생명·안전망'은 헐고, '뷰티·축제' 치장에 몰두	10
5. 공공질서 및 안전: 대전국민안전체험관과 맞바꾼 안전 예산	11
6. 체육: 꾸준히 증가하는 전문체육인 육성	11
<b>VII. 결론 - 2026년 예산안 총평</b>	<b>11</b>
대전광역시의회 예산 심의 가이드라인 제안	11
<b>참고 1 사회복지 분야 중 삭감사례</b>	<b>12</b>

 (정보공개)202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안.pdf

 (정보공개)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xlsx

 2026년도 본예산(안)\_세입\_일반+기특.pdf

 2026년도 본예산(안)\_일반+기특(1).pdf

# I. 서론: 2026년 재정 여건과 분석 방향

## 1. 2026년 정부 예산 운용 기조 및 대전시 재정 여건

2026년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시가 제출한 예산안 개요에 따르면, 지역 경제의 점진적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입 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전시의 주요 세입원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약 661억 원, 세외수입은 108억 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정부로부터의 보통교부세 또한 330억 원 소폭 증가하는 데 머물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물가 상승률과 필수 경상비 증가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실질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마이너스 성장'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보육·노인 등 4대 민생분야 중점 지원"과 "대규모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갈등이 예고된다. (일반회계 예산안 9쪽 참조)

## 2. 대전광역시 재정 건전성 현황: 빚내서 유지하는 확장 재정의 위험성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전시가 표방하는 '긴축 재정'과 실제 예산 편성 간의 괴리다. 대전시는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선언했으나, 실제로는 빚을 내어 재정 규모를 키우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방채(국내차입금) 발행 예정액은 1,844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25년 일반회계 본예산 1,160억 원 대비 무려 684억 원(58.97%)이나 폭증한 수치다. 반면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서 2026년 지방채는 156억 원으로 전년대비 71.11% 감소했다. 전체 세입 예산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9%에서 3.21%로 확대되었다. 부족한 세수를 지방채 발행으로 메워 민선 8기 핵심 방향성인 축제 관광 사업과, 대규모 SOC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빚으로 남게 될 것이다.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채무상환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865억2천만원으로 2025년 794억8천만원에서 1070억3천만원 증가해서 134.7% 증가했다. 지방채 발행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채무상환 항목으로 편성한 셈이다. (일반회계 예산안 25쪽 참조)

## 3. 분석의 관점: '민선 8기 공약사업의 명암과 시민 삶의 질'

가장 먼저 시 재정 악화를 이유로 내세운 긴축의 칼날이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를 따져본다. 시민사회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복지, 기후 위기 대응 등 시민 삶을 지탱하는 연성 예산에는 가혹한 삭감을 감행하면서도, 단체장의 치적을 위한 일회성 축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는 이중적 재정 운용 실태를 검증한다.

나아가 도시의 미래 경쟁력과 시민 주권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 '과학수도'와 '탄소중립'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R&D 및 환경 예산이 국비 삭감을 핑계로 방치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더불어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공동체, 인권 등 풀뿌리 민주주의 예산이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삭감되거나 폐지되었는지를 추적하여, 화려한 공약 사업의 그늘에 가려진 시민의 권리와 삶의 질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지 않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 4. 시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매년 대전광역시 당초 예산안 편성시기에 맞춰서 예산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시의회 예산 심의 일정과 맞춰 더 많은 시민들이 지방행정의 예산을 살펴보고 의견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울산광역시는 예산안 작성 기일에 맞춰 홈페이지에 예산(안)을 공개하고 있고, 점점 많은 지자체가 공개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아직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 영향이 간다는 이유'로 공개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공적 예산을 다루는 시의원들은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대전광역시 역시 적극적인 예산안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쓸것을 당부한다.

## II. 2026년 예산안 총괄 분석

### 1. 예산 총계 및 전년 대비 증감 추이: 빛으로 쌓아 올린 7조 원 시대의 그늘

대전광역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582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6조 6,771억 원 대비 3,811억 원, 비율로는 5.71% 증가했다. 외형적으로는 시 재정이 7조 원 시대를 열며 확장된 듯 보이나, 회계별 내부 구성을 들여다보면 일반회계의 성장 동력은 꺼져가는 반면, 특정 목적의 대규모 토건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와 빛(지방채)만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불균형 성장'임이 명백히 드러난다.

대전광역시는 2026 예산안에서 재정운영 방향으로 [4대 민생분야 중점지원]을 표명하고 있다. 4대 민생분야로 보육-노인/ 교육 / 청년 / 소상공인 을 들고 있는데, 청년 예산은 소폭 증가했으나, 사회복지 분야 중 노인 부문은 전체 예산 증가에 비해 역으로 감소했으며, 문화 및 관광예산은 16.05% 증가했다. 다른 민생분야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시민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되는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의 재원이 담긴 일반회계는 5조 7,394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924억 원(3.47%) 증가한 수치이나, 최근의 고물가 상황과 공무원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의 자연 증가분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편성'이나 다름없는 긴축 예산이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반면, 특별회계는 1조 3,1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87억 원(16.70%)이나 급증하며 전체 예산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러한 특별회계의 비정상적인 팽창은 민선 8기 최대 공약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이 본격화된 데 기인한다. 실제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987억 원에서 2026년 2,430억 원으로 무려 1,443억 원(146.12%) 폭증했다. 이는 대전시의 재정 구조가 시민의 보편적 삶을 돌보는 방향이 아닌,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특정 토건 사업에 모든 역량이 쏠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즉, 2026년 예산의 증가는 건전한 세입 확충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사를 위한 목적성 예산의 팽창이 만든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 (일반회계 예산안 15쪽 참조)

## 2. 세입 구조 분석: 자주재원 정체와 지방채 폭주의 위험한 동거

우선, 대전시의 살림 밑천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은 2조 6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25년도 증가율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부진이 세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외수입 또한 1,461억 원으로 8.06% 증가했으나, 전체 예산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역시 2조 7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0.40% 증가에 머물러 사실상 동결 상태다.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시의 구상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한다. (일반회계 예산안 39~40쪽 참조)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지방채(국내차입금) 발행의 지속적인 증가다. 2026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상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1,844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25년 일반회계 본예산 1,160억 원 대비 무려 684억 원, 비율로는 58.97%나 폭증한 수치다. 대전시는 표면적으로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빚을 60% 가까이 늘려가며 무리한 재정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당장의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향후 금리 변동에 따라 대전시 재정에 심각한 뇌관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 (일반회계 예산안 40쪽 참조)

단기간 지방세원의 극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더욱이 중장기 전망을 세워 지역 시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 3. 세출 구조 분석: 미래와 복지를 팔아 토건을 매입하다

기능별 세출 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전시가 2026년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 가치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토건'에는 예산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반면, '복지와 미래'에 대한 투자는 줄었다.

**첫째, 토건 중심 예산의 비대화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2,6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8%나 급증했다. 재난 방재와 관련된 시설 투자 확대가 주요 원인이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역시 1,2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74% 폭증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도 4,110억 원으로 8.18% 증가했다. 도로 개설, 산업단지 조성, 교통 시설 확충 등 눈에 보이는 시설 투자 사업들이 예산 증가를 주도했다. (일반회계 예산안 23쪽 참조)

**둘째, 미래 가치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홀대다.** '일류경제도시', '과학수도'를 표방하는 대전시의 슬로건이 무색하게도,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6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0%나 삭감되었다. 특히 '과학기술연구지원' 예산은 7.85%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중 지역대표산업 육성, 이차전지산업 육성 사업 모두 20% 가까이 삭감되었다. 이에 비해 센서 및 양자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만 54.82% 증가해서 일관성이 부족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에너지, 반도체 AI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살펴봐야할 부분이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의 최전선인 환경 분야 예산은 1,6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7%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등 시민 건강권과 직결된 '대기' 부문 예산이 4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17%나 대폭 삭감된 것은 충격적이다. 기후 재난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 편성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것은 2025년에도 대폭 삭감된 예산으로 기후관련 예산의 삭감기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일반회계 예산안 23~24쪽 참조)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회복지 예산은 2조 6,3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고작 0.98% 증가에 그쳤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삭감'이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도 노인 분야 예산이 8,2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3% 감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심각한 신호다.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이 자연 증가하는 구조 속에서도 총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노인 일자리, 여가, 건강 증진 사업들을 대거 폐지하거나 축소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일반회계 예산안 24쪽 참조)

종합하자면, 2026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빛을 내어 공사하는 동안, 과학 도시의 미래와 기후 위기 대응은 방치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외면한 가치 전도의 예산안"으로 규정할 수 있다. 긴축의 고통을 시민과 약자에게만 전가하고, 전시 행사에는 면죄부를 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시의회의 견제와 재검토가 요구된다.

### III. [핵심 분석 1] 지속되는 불균형: 축제·토건 vs 민생·참여

#### 1. 축제 및 홍보 예산의 고착화: '긴축'의 무풍지대

대전시는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공언했으나, 단체장의 치적과 직결되는 축제 및 홍보성 예산은 '긴축'의 무풍지대였다. 특히 '0시 축제' 관련 예산은 문화관광국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 등 타 부서 예산에 쪼개져 편성되는 이른바 '숨은 예산' 형태로 곳곳에 포진해 있어, 실제 투입되는 총액 규모는 표면적인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러 운영비의 위축 속에서 증가한 '**관광**' 부문 증액이다. '관광' 부문은 421억원이 배정되어 전년대비 37억원을 증액하면서 9.79% 증가했다, 이중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은 86억원으로 전년대비 24억원을 증액해 40% 증가했으며, '**관광축제 육성**' 예산은 13억 2,319만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10억 2,909만 원 대비 28.58%(2억 9,409만 원)나 증가했다. 긴축 기조하에서 대다수 민생 예산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행보이다. 이는 대전시가 시민의 고통 분담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사의 규모를 키우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방증한다. (일반회계 예산안 51쪽 참조)

또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의 '**명품도시 위상제고**' 사업 역시 5억 4,6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15%** 삭감했다. 해당 부분에는 '**도시브랜드 활성화**' 사업은 2억 639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1.16%나 삭감된 수치이다. '**공공시설물 명품도시디자인**' 사업 역시 3억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66% 삭감되었다. 민선8기 대전광역시는 부서까지 신설해가며 명품도시 관련 예산을 2025년 예산을 배정한 바 있는데, 2026년 예산안에는 해당 항목이 삭감된 것이다. 무리한 '명품' 디자인 시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전 과도한 예산 편성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회계 예산안 44쪽 참조)

문화예술과 소관의 '문화예술 육성발전' 정책사업 내 '**시민문화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42억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583.65% 폭증한 수치다. 국비 비율은 2천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편성되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장동 문예회관 15억 순증, 이종수도예관 건립 20억 순증, 원로예술인 특화 전시관 20억 순증 이 차지한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시설 투자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 사업 또한 180억 5,0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0.55% 감소한 수치인데,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 삭감분이 삭감분의 다수다. (일반회계 예산안 49~50쪽 참조)

#### 2. 시민 참여 예산의 행방: 선택적 지원

민선 8기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민 지우기' 기조는 2026년 예산안에서 정점을 찍었다.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인권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권리 증진을 위한 예산은 사실상 '고사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공동체 정책발굴**’ 예산의 삭감이다. 2025년 1억 6,936만 원이었던 예산이 2026년에는 고작 **687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95.94%가 삭감된 것으로, 사실상 사업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해당 단위사업의 세부사업 중 삭감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1억6천만원인데, 여비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지방재정의 수입을 다원화하고,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독려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포기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인권 분야 예산 또한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인권친화도시 조성**’ 예산은 2,349만 원으로, 전년도 7,178만 원 대비 **67.27% 삭감**되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인권 교육 등의 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류 경제 도시’라는 구호 속에 ‘사람’과 ‘인권’의 가치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은 14억 6,5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0.25% 증가에 그쳤다. 해당 파트의 주요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과 대전사랑운동센터 위탁운영(동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동결), 새마을운동 지원(7천만원 삭감), 바르게살기운동 지원(2천만원삭감), **자유총연맹 활동지원(6천2백만원 증액)** 등이 있다. 다른 사업들이 삭감되는 와중에도, 예산을 지켜냈다.

반면,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예산은 17억 3,0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8% 감소**했다. 자원봉사는 시민 사회의 자발적인 나눔과 참여의 상징이다.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메워주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결국 복지 사각지대의 확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대전시는 민선8기 시작부터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시민사회와 중간지원조직의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고 폐쇄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선택적으로 지원을 유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3. 대규모 SOC 사업:

시민 참여 예산이 펀드 취급을 받는 동안,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단체장의 공약 사업에는 천문학적 예산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임기 말을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착공하거나 예산을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된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이다. 2026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430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987억 6,300만 원 대비 무려 146.12% (1,443억 원)나 폭증했다. 트램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막대한 재정 투입이 현실화된 것이다. 문제는 이 재원의 상당 부분이 빚(지방채)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연료 방식이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건설비가 증가하고, 수소트램으로 연료가 결정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다. 1,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 만큼 빠른 완공을 위해서라도 재정계획이 충실히 논의되어야 한다.

도로 건설 및 관리 분야에도 예산이 집중되었다. **‘도로 건설 운영’** 예산은 342억 9,000만 원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외부 재원에 시비를 더해 대규모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사업의 세부 내역을 보면, 정립중~버드내교간 도로 개설 등 대형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은 필요하지만,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늘리는 도로 건설에만 치중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계획과는 배치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 관련 예산의 흐름도 심상치 않다. 일반회계의 ‘산업단지’ 부문 예산은 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764%라는 기형적인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과학벨트 개발 등을 위한 초기 투입 비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 개발 지원 예산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은 삭감하면서, 시설투자에만 예산을 배정한 것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IV. [핵심 분석 2] 미래 경쟁력의 위기: 과학과 기후

### 1. ‘과학도시’ 정체성의 실종: R&D 예산의 구조적 후퇴

대전광역시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과학수도’이자 ‘일류경제도시’를 시정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도시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편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자 도시 경쟁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실질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총액 감소를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의 연결 고리를 끊고, 특정 건설 사업에만 치중하는 기형적 구조**를 띠고 있다.

2026년 과학기술 분야 총예산은 607억 9,547만 원으로, 전년도 661억 5,120만 원 대비 53억 5,572만 원, 비율로는 **8.10% 감소**했다. 이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3.47%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대전시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얼마나 소극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을 뒷받침해야 할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 예산은 577억 7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5%(49억 1,672만 원)** 삭감되었다. 과학수도를 자임하는 대전시라면 자체 가용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연구 현장의 위축을 막았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 그러한 의지는 전혀 읽히지 않는다.

특히 대전시는 신성장 산업 진흥을 외치고 있지만, 최근 신성장 산업의 핵심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로봇 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은 정부 기조와 반대임이 확인된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예산은 35억 5,374만 원으로 전년도 60억 8,589만 원 대비 무려 41.61%(25억 3,215만 원)나 대폭 삭감되었다. 또한 **‘로봇드론산업 육성’** 예산 역시 57억 6,7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64%(29억 2,300만 원)** 줄어들었다. AI와 로봇은 대전이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반토막 낸 것은 미래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반도체산업 육성’ 예산 또한 57억 4,0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66%** 감소했는데,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의 성과를 홍보하던 시의 행보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대목은 ‘**센서 및 양자 산업 생태계 조성**’ 예산의 나 홀로 급증이다. ‘**센서 및 양자 산업 생태계 조성**’ 예산이 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82% 증가하고, ‘**바이오산업 육성**’ 예산이 115억 원으로 44.24% 증가하는 등 일부 분야의 증액이 있었다. 우리는 이 급증한 예산이 실질적인 기술 개발이나 기업 지원이 아닌, “**센터 건립 등 건설 사업이나 특정 단체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아닌지**” 강력한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러한 의심은 2026년 과학기술 분야 예산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것은 ‘대전테크노파크 추가 조성사업’으로 55억9천만원 증액해 186.5% 증가율을 보인다. 기술과 인력에 대한 지원이 삭감되는 와중에 건설 예산만 늘어난 모습이다.

과학기술 산업의 특성상 일관성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매년 영역별 널뛰는 방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건물 짓고 도로 닦는 토건 예산에는 수천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R&D 예산 수십억 원을 삭감하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의 전형이다.

## 2.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행사만 남은 ‘그린워싱’ 예산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생존의 문제다. 그러나 2026년 대전시 환경 예산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줄이고, 화려한 국제 행사 개최 비용만 늘리는 전형적인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 환경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은 1,635억 7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7%(80억 1,544만 원)** 감소했다. 예산 총액의 감소보다 더 뼈아픈 것은 내용의 부실함이다.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기**’ 부문 예산은 451억 5,198만 원으로 전년도 628억 5,758만 원 대비 무려 **28.17%(177억 559만 원)**나 폭락했다. 세부적으로 ‘**대기개선 기반구축**’ 사업이 4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57%** 감소했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예산 역시 7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21.68%** 삭감되었다. 이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인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예산마저 22억 3,2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0%** 감소했다.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운영 등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의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질적인 감축 노력은 뒷전으로 밀려난 셈이다.

반면, 행사성 예산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 2026년 개최 예정인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 개최’를 위해 신규 또는 증액으로 편성된 예산은 **33억 341만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관련 예산 5억 7,820만 원 대비 **471.33%** 폭증한 수치이다. 국제 행사를 통해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내실 있는 탄소 감축 사업 예산인 대기 환경 개선 예산을 177억 원이나 깎으면서 33억 원짜리 일회성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보여주기식 행사에 치중하느라 정작 시민의 폐 건강과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3. 환경 예산 구조: 녹색 도시의 빛바랜 청사진

도심 속 탄소 흡수원 확충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예산 또한 처참하게 삭감되었다. 단순히 시설 유지 보수비를 줄인 수준을 넘어,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자연’ 부문 예산은 116억 8,753만 원으로 겉보기에는 전년 대비 41.16% 증가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산림 휴양 시설 조성 등 건설 사업 증가에 기인한 착시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도심 내 녹지 공간을 늘리는 ‘**녹색도시 조성 및 홍보**’ 예산은 6억 9,861만 원으로 전년도 32억 5,561만 원 대비 78.54%나 삭감되었다. 또한 ‘도심 녹화사업’은 109억 원으로 **11.16% 감소**했고, ‘**공원녹지조성**’ 사업은 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60%나 급감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녹지 공간 확충 사업을 이토록 가혹하게 구조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V. 분야별 세부 분석: 숫자의 착시를 걷어낸 민생의 민낯

### 1. 사회복지: 의무 지출만 남고 ‘대전형 복지’는 실종

2026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조 6,391억 5,291만 원으로, 전년도 2조 6,134억 8,571만 원 대비 0.98%(256억 6,719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최근의 고물가 상황과 자연 증가분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동결’ 내지 ‘삭감’에 가까운 편성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내부 구성이다. 정부가 정해진 의무 지출은 늘었지만, 대전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량 복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정황이 뚜렷하다. (일반회계 예산안 23쪽 참조)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노인’ 부문 예산의 감소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노인 예산은 8,231억 6,485만 원으로, 전년도 8,577억 6,630만 원 대비 4.03%(346억 144만 원) 감소했다. 이는 사회복지 전체 분야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노후생활 지원’ 사업 예산이 65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7.46%(530억 원)나 삭감되었다. 주요 감소 원인은 ‘노인일자리 지원(지원)’사업의 179억 감액 ‘기초연금 지급’ 350억 삭감이다.

반면, ‘노인의 안전 및 건강증진’ 사업은 1165억원으로 전년대비 16.1%(161억원) 증가하였다. 대다수의 증가분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사업이 차지한다.

## 2. 교통 및 물류: 혁신 없는 ‘밑 빠진 독’에 재정 붓기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4,110억 6,4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8%(310억 7,420만 원) 증가했다. 그러나 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대중교통 운영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재정지원금 증액에 기인한다. (일반회계 예산안 24쪽 참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 지원 성격인 ‘시내버스 운영지원’ 예산은 782억 4,944만 원으로, 전년도 733억 8,627만 원 대비 6.63%(48억 6,317만 원) 증가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적자 보전 논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노선 효율화나 경영 합리화 대책 없이 관성적으로 지원금을 늘려주는 행태가 2026년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일반회계 예산안 69쪽 참조)

도시철도(1호선)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또한 증가했다. ‘대전도시철도 운영’ 예산은 670억 5,7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0%(54억 2,166만 원) 늘어났다. 공공교통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인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산은 74억 6,303만 원으로 23.91% 감소하여, 탄소중립 도시를 지향한다는 시의 정책 목표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일반회계 예산안 69쪽, 68쪽 참조)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도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들이 삭감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예산은 올해도 편성하지 않았고, 전기버스, 수소버스 구입 보조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28.9%)과 교통사고 취약구간 개선사업(-61.5%) 등 안전 관련 개선 사업도 줄줄이 삭감되었다. 1억2천만원이었던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도 전액 삭감되었다. 주차시설 운영관리(직접) 예산은 99.7% 삭감되고 주차시설 운영관리 예산이 61.6% 증액된 것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결국 2026년 교통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운영비 지원은 늘리고,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은 축소하는 퇴행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 3. 청년 및 일자리: ‘지속가능성’ 없는 단기 처방의 반복

청년 및 일자리 분야 예산은 겉보기엔 증액된 듯하나, 속을 들여다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에 머물러 있다.

‘청년’ 부문 예산은 170억 7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76%(16억 5,171만 원) 증가했다. 특히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164억 9,087만 원으로 9.34%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이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이나 소액의 활동비 지급 등 현금성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회계 예산안 24쪽, 57쪽 참조)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 및 일자리 창출 예산의 축소다. 기능별 분류상 ‘노동’ 부문 예산은 160억 8,1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5%(18억 7,722만 원) 감소했다.

2025년, 전체 예산의 0.32% 비중을 차지하던 노동 예산은 2026년 18억7천만원 감액되어, 160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전체 비중의 0.28%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5.31%(1억9천), 일자리창출 12.27%(15억7천만원), 노동단체 지원사업 6.78%(1억6천만원) 줄줄이 삭감되었다. (일반회계 예산안 23쪽, 63쪽 참조)

주택 부분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운영 사업이 1억1천만원 신규편성되었는데, 방향성은 맞을 수 있으나, 해당 금액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일반회계 예산안 57쪽 참조)

경기 침체로 민간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공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오히려 일자리 예산을 줄였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은 10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31% 감소했다. 이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학 기술 분야의 고급 일자리 위기, 그리고 공공 일자리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저소득층 일자리 위기가 동시에 겹치면서 2026년 대전의 고용 한파는 더욱 매서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예산안 63쪽 참조)

#### 4. 보건·식품안전: 시민의 ‘생명·안전망’은 헐고, ‘뷰티·축제’ 치장에 몰두

보건 분야에서도 공약사업에만 몰두하는 장면이 보인다. 고액의 치료비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무려 10억 7,661만 원(-65.8%)이나 삭감되었다. 또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우울·불안 등 마음 건강을 돌보는 ‘심리상담 바우처사업’(-42.8%)과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20.0%) 예산도 대폭 줄였다.

또한 시민의 식탁과 생활 환경을 감시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필수 검사 예산도 칼질을 피하지 못했다. ‘오폐수 및 폐기물등 검사’(-82.6%), ‘국민다소비식품 유해물질검사’(-48.5%), ‘지하수등 먹는물 검사’(-32.8%)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검사비가 대폭 삭감되었다.

반면, **뷰티·미용 관련 사업과 홍보성 예산은 ‘긴축’의 예외**였다. 식의약안전과는 필수 위생 검사 예산을 깎는 와중에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운영’(신규 4억 5,969만 원), ‘코리아 탑 메이크업 페스티벌’(신규 4,500만 원), ‘대전 미식 홍보영상 제작’(신규 8,000만 원) 등 신규 사업을

**대거 편성했다.** 기존의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육성 지원’은 100% 증액(2억 원→4억 원)되었다.

희귀질환자의 치료비와 먹거리 안전 예산을 삭감하여 메이크업 축제를 열고 홍보 영상을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낭비성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훼손된 공공보건 의료망과 안전 검사 예산을 즉각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5. 공공질서 및 안전: 대전국민안전체험관과 맞바꾼 안전 예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6년 34억1만원을 편성하면서, 전년대비 **240.9%증액(24억1천만원)** 했다. 동시에 **채무상환 항목이 213억 증가돼 1206% 증가했다.** 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감액되었는데,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지원(-45.7%)’,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25.6%)’,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28.7%) 삭감되었다. 반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47.7%(78억원) 이 증액되었는데 동시에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50%(3억,) 삭감’, 자연재해 저감사업 92.2%(2억9천)삭감, ‘재난대책비(지원) 100%(4억7천) 삭감 등이 이어지는 것은 해당 사업이 이전된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화재 관련 소방예산이 삭감되었고, 각 소방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는지 시의회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6. 체육 : 꾸준히 증가하는 전문체육인 육성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체육 예산이 급증했는데, 1687억원으로 전년대비 33.63% 증가했다. 전문체육 육성 52억 (21.13% 증액)은 매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전문체육 육성에 투여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대전고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35억 신규 편성되었다.

시 소속 운동부 육성 사업역시 종목별 지원 예산이 편차가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고, 생활체육동호회 리그 지원 사업은 3개 종목(야구, 농구, 볼링)만 지원하는데 그 선정기준과 이유도 점검이 필요하다. 시민 건강 증진과 체육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시민참여와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와중에 체육 예산 중에도 전문체육인, 시소속운동부 예산만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이다.

## VI. 결론 - 2026년 예산안 총평

2026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재정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운 '긴축'의 칼날이 공정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방채 발행액을 전년 대비 약 60%나 늘리면서까지 건설 사업과 축제성 예산은 대폭 꾸준히 늘리고 있다. 주요 상승분은 신규 건물 건축 예산임이 확인되었다. 반면, 실질적인 '과학수도'를 위한 R&D 예산과 기후 재난에 대비할 환경 예산은 삭감되었으며,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으로 축소되었다. 거기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축소되었다. 이는 당장의 가시적 성과에만 매몰되어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편성이다. 특히 필수 의료비와 안전 검사비까지 삭감하며 뷰티 관련 일회성 행사에 치중한 점은 시정의 우선순위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아닌 단체장의 홍보에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 대전광역시의회 예산 심의 가이드라인 제안

대전광역시의회는 이번 예산 심의에서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과 핵심 사업을 중점적으로 심의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재정 건전성 회복과 지방채 검증**이다. 1,844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선택인지 따져 묻고,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선심성 토건 사업 예산을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

- **중점 검토 사업:**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비 증가분, 대전테크노파크 추가 조성사업, 도로망 확충 사업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시기 조정 필요성.

둘째, **낭비성 행사 예산의 대대적 삭감과 민생 예산 확충**이다. 축제 및 관광 홍보 예산과 부서별로 쪼개진 '숨은 축제 예산'을 찾아내 삭감하고, 확보된 재원을 필수 복지 예산 복원에 배정해야 한다.

- **삭감 대상:** 0시 축제 관련 간접 예산, 세계태양광총회(33억 원),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운영 및 축제 예산.
- **증액(복원) 대상:**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심리상담 바우처, 보건환경연구원 필수 검사비.

셋째, **미래 성장 동력 및 기후 예산의 정상화**다. R&D 예산 삭감은 과학 도시 대전의 생존 위기다. 미래 산업 예산과 기후 대응 예산을 전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 **복구 대상:** 인공지능(AI) 및 로봇·드론 산업 육성 예산, 반도체 산업 육성 예산, 대기개선 기반구축 및 미세먼지 저감 예산, 도심 녹지 조성 사업.

넷째, **플뿌리 민주주의 예산 복원**이다. 합리적 근거 없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시민 참여 및 권리 증진 예산을 되살려 행정의 공공성을 수호해야 한다.

- **복구 대상:** 공동체 정책발굴, 인권친화도시 조성 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 등

## 참고 1. 사회복지 분야 중 삭감사례

### <사회복지 중 전액 삭감>

가족여성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가족여성 :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가족여성 :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가족여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운영  
 가족여성 : 아동 희망 성장 사다리 사업  
 가족여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노동 : 우수기업 청년 채용  
 노동 : 대전산업단지 2030 일자리 육성 프로젝트  
 노동 : 대학 취업역량강화 지원  
 노동 : 청년성장프로젝트  
 노인 : 저소득 노인 보조보행기 지원(주민참여예산)  
 노인 : 시 노인회관 건립  
 노인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노인 : 시니어 치매예방 주산교육  
 보육 : 3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  
 사회복지운영지원 : 희망나눔콘서트 지원  
 사회복지운영지원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고독사 예방 사례관리)  
 청년 : 대전청년하우스 운영  
 주택 : 낭월 다가온 건립  
 취약계층 : 노숙인복지사업  
 장애인 : 지역발달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 중증장애인 기저귀 교환대 설치  
 장애인 :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지원

### <사회복지 분야 중 삭감 사례>

가족여성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 -100만원 (-17%)  
 가족여성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 -1500만원(-50%)  
 가족여성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4625만원 (-26.8%)  
 노동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1억9525만원 (-15.3%)  
 노동 :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 / -1억원 (-16.7%)  
 노동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2억5천만원 (-31.2%)  
 노동 : 공공근로사업비 지원 / -3억4460만원 (-31.2%)  
 노동 : 일자리 창출 / -2억원 (-19.6%)  
 노동 :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 / -2억원 (-13.3%)  
 노동 :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 -1억65백만원 (-82.5%)  
 노동 : 대전형 좋은일터 만들기 / -2억원 (-20%)  
 보육 : 급식위생 관리지원 / -6893만원 (22.1%)  
 청소년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2698만원 (17.3%)